

태양광발전 투자 제주도민 '속얇이'

전국적으로 RES 가격 폭락세... 제주는 거래 중단 태양광 전문가 "대출받아 투자한 도민은 이자 걱정" 제주 2030년 태양광 1411MW 달성 계획 차질 불가피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도민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업체의 '주가'이자 '화폐'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가격(SMP)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2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육지부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은 4만원대로, 2017년 평균가격 12만 8000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REC 평균가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0원으로 하락, 사실상 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는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이미 확보했고 육지부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많아지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따르면 500MW 이상 규모의

대형 발전사는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가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 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도내 태양광발전 전문가는 "REC는 3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가격을 지켜보면서 다시 오를 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현재 제주지역 REC가격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0k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어 도민들은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지역인 경우 육지부에 비해 낮은 REC를 적용하는 대신 SMP(계통한계가격)는 높게 책정해 주고 있다. 육지부 SMP가격은 1kW/h당 90원이지만 제주는 150원이다. 육지부는 LNG발전 등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낮지만 제주지역은 송전선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SMP+REC 합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SMP를 높이는 대신 REC는 육지보다 낮춰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4085MW)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중 태양광 발전은 34.4%인 1411MW이다.

제주삼다수 최초 공장 21년만에 해체

1998년 가동 L1 라인 부품 매각 절차 진행

제주 삼다수를 처음 생산한 공장이 21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 설립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여부 문제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제주도개발공사(JPDC)에 따르면 조천읍 교래리 소재 'L1라인'의 생산설비 해체 및 부품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입찰 대상은 L1라인에 설치됐던 모노블럭과 라벨러, 수축포장기, 랩핑기, 컨베이어 등 10가지로 모두 삼다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던 부품들이다.

L1라인은 삼다수가 1998년 3월 처음으로 출시될 당시 생산을 책임졌던 공장이다. 이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 L2-L4라인까지 추가로 증설됐으며 지난해에는 450억원을 투입해 L5라인도 가동에 돌입했다. 취수허가량도 1일 기준 2002년 868t에서 지난해 4600t으로 크게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JPDC는 삼다수 폐트병을 제작하는 제빙기에서 30대 노동자가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빙기뿐만 아니라 노후된 L1라인까지 철거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JPDC 관계자는 "L1라인 해체는 품질 향상을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JPDC는 L1라인을 대체할 L6라인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인 JPDC를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있는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20일 현재까지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제처위원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도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18건 적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비상구도민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5곳에 대해 불시 피난·방화시설 테마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행위, 소방시설 기능차단·고장 방지 등 고질적

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적치 등 18건의 안전관리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겨울 동안 소방시설 차단행위 및 방화문 기능장애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시정 등 계도행위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대학교 은행나무길 풍경. 쾌청한 가을날씨를 보인 20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은행나무길을 걷고 있다.

제주 고액상습체납자 24명 명단 공개

법인 4곳 79억1900만원 개인 20명 8억2000만원 세외수입체납자 첫 공개

제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u.go.kr)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체납액은 87억3900만원(법인 79억1900만원, 개인 8억2000만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돼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정

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2019 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올해 아동학대 415건 신고 경찰 학대 우려 집중 감시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8일까지 2개월간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경찰서에 배치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일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건에 견줘 22% 증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2019 Jeju International Universal Design Expo

UD 학술 UD 공감 UD 전시 UD 체험

2019.11.28(목) ~ 11.30(토)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미래복지전략포럼 | 주관 | JIUD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 후원 | 크레디트 제주특별자치도

